

# IIRI Online Series

##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과 빅테크 기업규제 강화의 시사점

왕 윤 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2021. 9. 29

##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과 빅테크 기업규제 강화의 시사점



왕 윤 종 |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소강사회’를 넘어 ‘공동부유’로

소강사회 달성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그리고 시진핑 사상의 핵심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 개념이 등장했다.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직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 촉진, 금융 리스크 대비와 해소, 금융의 안정적 발전 관련 문제를 검토했다. 시 주석은 동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共同富裕是社会主义的本质要求, 是中国式现代化的重要特征)”이라면서 “국민 중심적 발전 사상을 견지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要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 在高质量发展中促进共同富裕)”고 강조했다.<sup>1)</sup> 이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을 통해 사회적 생산력을 확대하여(允许一部分人, 一部分地区先富起来, 推动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했으나, 빈부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두 번째 백년까지 전인민의 행복 달성을 위해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2차, 3차 분배를 통해 중산층(中等收入群)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지 물질적 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부의 공평 분배를 강조

1)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委员会第十次会议强调 在高质量发展中促进共同富裕 统筹做好重大金融风险 防范化解工作 李克强汪洋王沪宁韩正出席-新华网 (xinhuanet.com)

했다. 특히 농민농촌공동부유(农民农村共同富裕)를 중시하고 있다.

## 공동부유의 개념이란?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홍콩대학의 China Media Project(中國傳媒研究計劃)에 따르면 1953년 12월 12일 인민일보의 헤드라인에 공동부유는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는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자본주의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길이고, 절대다수는 빈곤과 파산에 이르는 길(资本主义的路是少数人发财, 绝大多数贫穷破产的路)이며, 반대로 사회주의는 농민이 공동부유에 이르는 길(社会主义的路是农民共同富裕的路)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모험은 실패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1978년 12월 8일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되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상사회를 달성하려면 먼저 생산력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 체제전환인가? 체제변형인가?

마오쩌둥 사망 이후 덩샤오핑이 추구한 개혁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한 체제전환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현대 중국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비교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는 「홀로 선 자본주의(Capitalism Alone, 2019)」에서 중국은 의심할 바 없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은 존재감이 없었고 미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의 자유시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와 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중국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된 국가이나,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한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근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정치세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사회적 역량의 조직화 부재에서 찾고 있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하부구조인 경제체제 측면에서는 체제전환(Regime Change)으로 볼 수 있지만,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를 고려한다면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공동부유는 중국의 체제 정체성 복원을 위한 개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천명하게 된 것은 현재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富)의 불균등한 분배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체제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현 중국 지도부가 부의 불균등 분배를 진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소득과 부의 2차 분배를 담당하는 정부가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재산세, 누진적 소득세의 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속증여세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밀라노 비치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 공산당원들이 중국의 부유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민영기업가들이 부의 양극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한 방법 역시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의 산적한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게임, 음식배달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을 경영하는 민영기업의 막대한 수익창출이 주주로 참여하는 외국자본과 일부 민영자본가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0년 말 살아있는 재신(財神)으로 추앙받던 마윈(马云)에 대한 비판에 이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인사도 아닌 인터넷 논객 리광만(李光滿)의 공동부유에 대한 개인 칼럼에 대해 중국 정부의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나서서 그의 글을 게재했고, 애국주의의 선봉장인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편집장이 등판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위 문혁 2.0 논쟁이 뜨겁게 불붙기도 했다. 리광만의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 변혁(深刻變革)이 필요하다는 신좌파적 시각을 대변

했다. 이에 후시진은 리광만이 너무 나갔다고 하면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가 좌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외신을 의식하는 글을 쓰면서 진화에 나섰다.

## 공동부유의 시범구, 저장성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공동부유의 시범구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인 저장성을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저장성 당서기였고 저장성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장성은 중국 내에서 민영 자본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다. 특히 마윈이 사업을 일으킨 알리바바의 본사가 저장성 항저우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내수에 치중한 빅테크 기업이 해외에 상장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제조업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전자상거래, 게임, 배달, 사교육 등 분야의 민영기업은 서비스기업이다. 서비스기업이 발전해야 내수시장이 확장되어 쌍순환의 한 축인 국내 대순환의 기반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미련은 계속 남아 있다. <14.5규획>에서도 여전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과학기술 기반의 자력갱생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영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도 공동부유의 희생양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현재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경제력집중에 대한 제한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즉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되자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했다. 즉 디디추싱은 플랫폼 앱을 통해서 운영되는 회사인데, 앱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였고, 고객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데이터 안보 차원에서 디디추싱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멀쩡하게 사업을 허용하다가 갑자기 상장 이후 규제에 들어간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가격의

50% 수준으로 주가가 폭락했고,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자율자동차 관련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에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 딜리버리 사업체인 메이투완을 보면, 홍콩에 상장된 기업으로 대주주는 텐센트이다. 메이투완에 대한 규제는 과도한 독점을 이유로 배달업체 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보험가입, 의료비 지원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공동부유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정부의 규제조치이다. 다음으로 텐센트에 대한 규제는 게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을 주중에는 완전히 차단하고 금토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게임은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규제는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교육사업은 비영리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된 사교육 업체들은 자진해서 비영리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주가는 크게 폭락했다.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업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장치산업인 국유기업의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공동부유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다.

공동부유에 대한 신화망의 영문 설명 자료를 보면 공동부유는 평등주의가 아니며, 부자에게서 갈취해서 빈자를 돕겠다는 식으로 서양 언론이 곡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행보라는 서양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9월 2일 “디지털이 미래를 열고 서비스가 발전을 촉진한다(数字开启未来, 服务促进发展)”는 주제로 개최된 「중국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개방 수준을 높여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구 건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규칙 마련을 강화하고 베이징 등이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 규범 연결 전시범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디지털무역시범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 주식

시장인 ‘신삼판(新三板)’ 개혁을 심화하고,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sup>2)</sup>

##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성과를 공정의 잣대로 보는 것은 필요하다. 소비자 후생의 증가를 가져다주었지만, 한계비용 제로의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살려 규모의 경제로 독점이윤을 창출하는 빅테크 기업을 혁신의 화신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당분간 뜨거운 논쟁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소강사회를 넘어 공동부유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이 국가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 민영기업의 발전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건강한 자본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정부도 공동부유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화망을 통해 밝히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 경제력집중이 부의 편중을 가져오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

### 저자 소개

왕윤종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과 경제성장 분야의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실장,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북경 근무 중 중국한국상회 제19대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2019년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6년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달러, 유로, 위안화의 3대 기축통화의 미래에 관한 「달러패권」이라는 저서를 발간했고, 최근 들어 미중 통상분쟁, 위안화 블록, 한중 FTA, 중국 금융시스템, 홍색자본주의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mail: [yjwang@dongduk.ac.kr](mailto:yjwang@dongduk.ac.kr))

2) 习近平在2021年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全球服务贸易峰会上的致辞（全文）-新华网（news.cn）